

말 바꾼 김용현 “의원” 아닌 ‘요원’ 빼내라고 했다”

현재 탄핵심판 4차 변론 기일

윤석열-김용현 증인으로 대면 尹 직접 질문에 “이제야 기억난다” 병력 투입은 국회 질서유지 위한것 국무위원 일부 비상계엄 선포 동의

12·3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헌법재판소(현재) 대심판정에서 피청구인과 증인으로 대면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핵심 쟁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 책임을 모두 뒤집어 쓰는 취지의 증언을 되풀이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한 계엄군 지휘부 진술과 달리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날 현재 대심판정에서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구속된 상태로 증인석에 나선 김 전 장관은 국회 측이 제시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쟁점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증언을 이어갔다.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이 김 전 장관에게 “과중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빼내라고 지시한 것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 맞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윤 대통령 측이 김 전 장관에게 “12월4일 새벽 12시20분께 과중근 특전사령관에게 ‘국회의원 150명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의사당 문 열고 들어가 의원들을 데리고 나와라’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없다”고 답했다. 이어 “과 사령관이 김병주 의원 체념에 나와서 김 의원이 ‘의원을 끌어내려고 한 거 맞죠?’라고 유도 질문을 했다”며 “사실은 증인(김 전 장관)이 과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 상황이 혼잡하다는 보고를 받고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의원이 국회의 의원들을 빼내라고 둔갑한 거냐”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봉쇄 의도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투입 병력은) 국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지 봉쇄할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부대가 모두 들어와야 하고 군 병력이 1만~3만에서 최대 5만~6명은 동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는데, 윤 대통령이 경고용이라며 소수만 동원하라고 한 것, 윤 대통령이 “네”라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제 생각과 달랐지만 윤 대통령의 지시라 존중하고 준비했다”며 “간부 위주 초기 병력 정도만 투입하라고 하니 계엄을 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들어 대통령에게 ‘이게 계엄이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말했다. 또 실탄 동원 여부와 관련해서는 “군부대가 출동하면 개인 화기와 실탄 휴대는 기본”이라며 “이번에는 안전 문제로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대대급이 통합해서 보관했다. 안전 때문에 개인 휴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달 받았다는 ‘비상입법기구 쪽지’는 자신이 직접 작성했고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며,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수 병력만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위헌 논란이 있는 계엄포고령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은 “(작성한 포고령을 건네주니) 윤 대통령이 쪽 보고는 ‘통행금지 부분은 시대에 안 맞다.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겠냐’라고 해 이견 삭제했다”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소극적으로 포고령을 검토했다는 취지다.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취지의 포고령 1호가 국회의 입법이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목적이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일부가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동일한 사람이) 누구인지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5차 변론기일은 다음달 4일 열리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석에 출석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광주보건환경연, 설 연휴 비상대응체계 가동

감염병·환경오염·동물위생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설 연휴 기간 감염병 발생과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하고 가축전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25일부터 30일까지 감염병, 환경오염, 동물위생 등 총 3개 분야 비상대응반을 운영한다. 연구원은 긴 연휴 기간에 따른 국내외여행 등으로 감염병과 집단 식중독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29명의 비상대응요원반을 구성했으며, 광주시, 자치구, 질병관리청 등 유관부서와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가동한다. 또 수질오염사고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대

비에 수질측정 조사반과 대기환경종합상황실도 운영한다.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즉시 원인파악과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시민과 언론사에 발령상황을 신속히 전파할 예정이다. 연휴기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유입을 막기 위한 가축전염병 특별 방역대책상황실도 가동한다. 광주지역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인 1조로 구성된 비상근무대기조 등도 구성했다. 정현철 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윤 내란 혐의 수사’ 공수처 손 떠났다...이제 검찰의 시간

구인·현장조사 번번이 실패 “검찰 조사 진상규명 효율적 판단” 증거 포함 69권 수사기록 전체 송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보낸 뒤 기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이다. 공수처는 23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계속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계속 조사를 시도하기보다는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그간 수사 상황을 종합하고 필요한 사항을 추가 조사하는 것이 사건 진상규명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송부 배경

을 설명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한 검찰 및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결과뿐만 아니라 공수처가 자체 확보한 증거를 종합해 기소를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투입하길 원한 병력 인원 규모와 추가 비상계엄 언급 등에 대한 다수 증거를 자체 조사 과정에서 확보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이날 이런 증거를 포함한 수사기록 전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릭스)을 통한 전자 방식은 물론 실물로 검찰에 송부했다. 기록 분량은 69권으로 총 3만 페이지가 넘는 수준이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을 구속한 공수처는 거듭된 출석 요구 불응에 강제구인과 서울구치소 현장 조사까지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바람에 번번이 실패했다. 지난 22일에는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관저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경호 구역을 이유로 불허하면서 불발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결국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한 번 하지 못한 채 1차 구속 기간으로 자체 계산한 28일보다 닷새 빠른 이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검찰과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인 구속기간을 열흘씩 나눠 쓰되, 공수처가 열흘보다는 일찍 검찰에 기록을 송부하기로 사전에 협의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여기에다가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가 이어지면서 정확한 구속기간 셈법이 분분한 상황에서 자칫 실기에 윤 대통령이 석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보수적으로 송부 시기를 판단했다는 게 공수처 설명이다. 한편 공수처는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 관계자들 사건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공조본 체제도 계속 유지한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한 뒤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73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광주~나주 광역철도 효천역 경우 또 제동

국토부, 변경 불가

광주시가 추진중인 광주~전남 나주 광역철도 구간 효천역 경우 사업에 또 제동이 걸렸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광주시에 공문을 보내 광주 효천역을 경유하는 노선 변경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효천역이 빠진 노선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예비 타당성 조사(이하 예비타)를 중지해달라는 광주시의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는 효천역을 경유하는 노선 변경에 따른 비용 대비 편익, 표정속도 등을 자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경제성 향상 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제

출한 뒤 예비타 중지를 요구했다. 현재 효천역 경우가 빠진 채로 광주 상무역, 나주 남평역, 나주 혁신도시, KTX 나주역을 연결하는 총길이 26.46km의 복선 전철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예비타가 진행 중이다. 예비타 결과는 오는 6월 나올 전망이다. 예비타 끝나고 노선 변경(효천역 경우) 등 변수가 없다면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등을 거쳐 오는 2029년 착공 예정이다. 시는 예비타 통과 후 효천역 경우를 위한 노선 변경이 가능한지 국토부와 협의를 위한 여건은 방침이지만, 국내 정치 상황 등이 워낙 불리한 탓에 성사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국가철도공단 공고 제2025-19호

「광주송정~순천 철도건설사업(3.4공구)」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광주송정~순천 철도건설사업(3.4공구)」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4일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 사업개요
 - 사업명: 광주송정~순천 철도건설사업(3.4공구)
 - 위치: 전라남도 장흥군 장평면 일원 ~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일원
 - 규모: 총연장 94.767km 중 39.098km(3.4공구)
 - 승인기관: 국토교통부
 - 사업시행자: 국가철도공단
-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지자체명	개최일시	개최장소
보성군	2025년 02월 19일(수) 15:00	특광면문화복지센터 (전남 보성군 특광면 역전길 7-9)
- 의견진술자 추천
 - 추천대상: 공청회 개최 대상지역 주민이 추천
 - 제출범위: 의견진술자 인적사항 및 진술하려는 의견 개요 등
 - 제출방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2호외) 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제출
※ 문의: 보성군(061-850-5332)
 - 제출기한: 공청회 개최 7일전까지
 - 의견진술자료 추천된 경우 지자체 담당자를 통해 개별 통보
- 기타사항
 - 원활한 공청회 진행을 위해 진행인원의 안내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가철도공단 영향평가부(042-607-45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및 수증 신고의 공고

민법 제1053(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 제1056(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에 의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상속재산 및 유증 받은 자는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1월 24일
-다 음-

가. 사건번호: 2024년419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나. 청구인: 이환일
전남 영암군 삼호읍 신호정길 43-17(목포광명면)
다. 피상속인(사망자):
(1) 성명: 김환희
(2) 출생일: 1959.02.12, 사망일: 2024.12.05
(3) 최후주소: 전남 영암군 삼호읍 신호정길 43-17 (목포광명면)

라. 신고장소: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김준범
목포시 경의로 300(양암동)에메달트 빌즈2층 208호

마. 신고기간: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2차)

본 회사는 2024년 12월 06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동년 12월 23일자로 해산 등기를 완료하였사오니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상호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16, 4층 (지평동)
청산인 조성래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